



〈대전일보 창간 65주년 기념〉

제61차 지역정책포럼

- 일 시 | 2015. 2. 10(화) 10:30-17:20
- 장 소 | 대전일보사 강당(7층)
- 주 제 | 2015년 대전·세종·충남의
발전비전과 전략
- 주 최 | 세종특별자치시, 대전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지역정책포럼,
대전일보
- 주 관 | 대전일보

진행순서

시 간	일 정	주 제	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10:30 ~ 10:40	개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 김영진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 • 환영사 : 남상현 대전일보사 사장 			
10:40 ~ 12:00	제1세션	• 2015년 대전시의 발전비전과 전략	류순현 행정부시장	최효철 (대전대)	김 욱(배재대), 김경희(대전 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박찬인(충남대), 송기환(대전대), 안기돈(충남대), 전영훈(대전대)
12:00 ~ 13:00	오찬				
13:00 ~ 14:20	제2세션	• 2015년 세종특별 자치시의 발전비 전과 전략	이재관 행정부시장	윤기석 (대전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금홍섭(혁신자치포럼 대표), 김용원(건양대), 김창수(대전대), 성선제(고려대), 임재일(공주대)
14:20 ~ 14:30	휴식				
14:30 ~ 15:50	제3세션	• 2015년 충청남도의 발전비전과 전략	송석두 행정부지사	류진석 (충남대)	김소영(카이스트), 성태규(충남발전연구원), 원구환(한남대), 임종호(대전대), 정주영(충남대)
15:50 ~ 16:00	휴식				
16:00 ~ 17:20	제4세션	• 충청 상생협력의 비전과 과제	신희권 (충남대)	김영진 (포럼 공동 대표)	고봉준(충남대), 곽현근(대전대), 김종남(대전시민사회연구소), 류철호(건양대), 유병선(충남대)
17:20	폐회 → 만찬(18:00)				

2015년 대전시의 발전비전과 전략

류 순 현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2015년 대전광역시 비전과 발전전략

류순현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올해는 민선6기 대전호가 맞이하는 실질적인 출범 원년으로써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대전이 직면한 대내외적인 환경과 도전에 맞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기입니다.

최근의 시정현안을 돌아보면 호남KTX 서대전역 경유와 사이언스 콤플렉스 건립 등 지역과 지역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얽히고설킨 과제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충청권광역철도망, 과학벨트 등의 문제는 충청권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현안으로써 협력의 외연을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시기에 지역의 석학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역정책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시정비전과 전략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성년이 되었습니다. 더 큰 도약을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진단하고 점검하는 한편,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각 방면의 욕구가 증대하면서 크게 3가지 축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첫째, 호남KTX 서대전 경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과 지역간에 상호 경쟁하는 한편으로 상생의 길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자주재정권 확충 등 지방과 중앙간의 갈등관계가 심화되는 속에 정부 출범 3년차로써 창조경제 등 국정과제에 대한 지방적 실현욕구도 한층 증대될 전망입니다.

셋째,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의 본질인 시민참여와 시민행복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와 같은 정책환경과 여건을 반영하여 올해 시정운영방향을 시민적 가치실현, 3대 역점추진과제, 현안사업 해결, 연계성의 강화에 두고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적 가치실현입니다.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시민의 위임에 의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도시간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면서 시민적 가치실현은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민선6기 대전시는 시정핵심 가치를 ‘시민과 경찰과 통합’에 두고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시민의 전방위적인 참여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대 브랜드 사업을 확정하는 등 95개 시민과의 약속사업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의 시정좌표를 「행복드림」으로 선정하고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00여명의 공무원이 기업과 1:1로 결연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기업지원도우미제를 역점 운영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2월말에는 500여명의 보통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행복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되어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을 협의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참여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8명의 명예시장이 6개월 임기 속에 시정 각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시에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활발하게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 도시행정은 경제, 문화, 환경, 복지 등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고, 어느 하나 소홀이 할 수 없는 복합행정이지만, 그 중에서도 올해에는 3대 부문을 역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8년까지 1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2,000개의 강소·벤처기업을 육성하며 GDP 규모를 전국 대비 3%까지 확대해 나가기 위한 「행복경제 1.2.3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새롭게 설치한 도시재생본부를 콘트롤 타워로 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조화를 이뤄 도시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원도심 활성화」에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친서민, 친환경적이면서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스마트한 「대중교통 혁신」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전개해 가겠습니다.
셋째,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민선6기가 출범한 지난해는 시정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주요현안 정상 추진에 진력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결정과 도청이전특별법 통과, 회덕 IC 건설, DCC 다목적전시장 건립 등 지역의 크고 굵직한 현안이 정상 추진케 도에 오른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작년의 추진성과를 기반으로 시정 각 부문에 대한 현안사업의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필요한 시기로써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시민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계성의 강화입니다. 최근 호남KTX 서대전역 경유문제를 놓고 대전, 호남, 충북간에 갈등국면에서 배운 바와 같이 지역간의 경쟁 구조는 증가될 것이기에 지역간의 연계성 강화라는 새로운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충청권이라는 울타리에 있는 4개 시·도조차 사안에 따라서는 경쟁과 갈등과 상생이라는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합종연횡이 활발히 전개될 것이기에 충청권행정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사이언스 콤플렉스 건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의 연계성 강화는 물론 출향인사에 대한 교감과 교류를 확대하고, 충청권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협조채널 구축도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올해 겨울은 유난히 따뜻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한파는 매섭기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돌밭을 우직하게 가는 소처럼(石田耕牛) 시민과 함께 시민행복과 대전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해 갈 것을 다짐하면서 기초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비전과 전략

이 재 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비전과 전략

이재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I. 세종시의 설치 배경과 특수성

1. 세종시의 설치배경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1세기 최대 규모의 국가정책 사업으로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민에게 생활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이다.

따라서, 세종시의 추진은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되, 기존의 수도권의 과밀현상 해소전략이 지방의 내성적인 발전전략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의 물리적 규제에 역점을 뒀 그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즉 공간적 분산정책에 더하여 비공간적 분권정책을 동시에 활용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도모함으로써 수도권 중심현상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한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요, 세종시이다.

세종시 건설 추진과정

- 노무현 대통령 후보 행정수도 건설 공약(2002. 9.)
- 「신행정수도 특별법」 국회통과(2003.12.), 헌재 위헌결정(2004.10.)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제정(2005.5.)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수립(2005.10.)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0.12.)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2012.7.1.)

2. 세종시의 특성

이렇게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세종시는 우리나라 최초로 순수한 단층제 광역지방자치단체라는 특수성 등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우리나라 최초 단층제 광역자치단체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세종시 뿐이다. 세종시와 유사하게 광역자치단체이면서 산하에 기초자치단체(자치시·군·구)를 두고 있지 않는 곳이 제주특별자치도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에서 광역사무를 담당하고 도 산하에 두고 있는 2개의 행정시에서 기초사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시·군·구를 두지 않고 있는 세종시와는 또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층제 광역단체로서의 세종시는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한 기관에서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행정효율성 증대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구분 없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칫 대민서비스의 질 등 행정의 질적인 면에서의 저급화와 새로운 모델에 대한 행정인력 및 지방재정 교부제도 등을 통한 정부의 특별한 배려가 없을 경우 지방재정자립기반 마련이 더욱 어렵다는 단점도 발생하고 있다.

2) 대한민국의 행정중심도시이자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앞서 밝혔듯이 세종시는 지난 2005. 10월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단계로 36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4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세종시에 이전을 완료하여 명실 공히 대한민국의 행정중심도시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종사무소의 설치로 이어지는 등 세종시가 지방분권의 거점도시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발전할 것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3) 계획 성장도시의 특성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에 의해 탄생한 도시이고, 이미 대도시로 성장한 이후 광역자치단체가 된 다른 도시와 달리 오는 2030년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개발과 그로 인한 인구유입 효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도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세종시의 특성은 2012.7월 세종시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6만 명의 인구 증가를 유인하는 효과와 함께 각종 개발 사업에 의한 공공시설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행·재정적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4) 편리한 교통 환경 등 지리적 특성

세종시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13개

교통망을 구축하는 등 대한민국 광역교통체계의 중심축에 위치하게 되고, 고속도로(5개노선)와 철도 및 인근에 당진평택항과 청주국제공항이 소재하는 등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다.

II. 세종시의 현황 및 여건과 발전방향

1. 세종시의 현황

세종시의 면적은 465km²이며, 이는 서울특별시의 4분의 3 정도가 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신도시지역의 경우 73km²로 경기도 과천시의 약 2배 정도가 된다.

행정구역은 1읍 9면 3행정동(14개 법정동)이고, 행정조직은 1실 5국 1본부이며, 보건소와 농업센터 2개의 직속기관과 2개의 사업소를 두고 공무원은 총 1,506명(일반행정 1,324명 / 소방직 182명)으로 출범 전 대비 903명이 증가됐다.

인구는 2015.1월말 현재 163,716명으로 세종시 출범 전(107,460명)에 비해 약 56,256명(52.4%)이 증가한 것이고, 지난 2014.12월말 인구(158,844명)보다 4,872명이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2014년) 7월 이후 신도시지역의 아파트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매달 4~5천 명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2015년도 세종시의 재정규모는 9,676억 원(일반회계 6,950억 원 / 특별회계 2,220억 원 / 기금 506억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7,900억 원) 대비 22.5%가 증액됐으며, 세종시정 2기 100대 과제 이행, 정부의 복지확대, 시청사 이전 및 공공시설물 인수·운영비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됐다. 특히 금년도 재정규모는 세종시 출범 전 연기군 예산(3,700억 원) 대비 161.5%(5,976 억원) 증가된 것이며, 여기에 신도시지역에 투입되는 건설청 예산(5,013억 원)을 더하면 총 1조4천7백억 원 정도로 급성장한 상황이다.

또한, 사업체는 6,600여 개로 세종시 출범 전보다 27%(1,400여개), 의료기관(149개)과 학교수(81개)도 각각 73%(63개)와 42%(24개) 증가됐다.

2. 여건과 발전방향

세종시는 2014년 말까지 2005.5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제정과 2005.10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수립이후 그동안 10년 가까이 준비 끝에 총 50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완료되어 16,000여 공직자와 연구원들이 세종시에 자리 잡게 됐다.

이는 당초 중앙행정기능과 첨단지식기반기능, 의료·복합기능, 대학·연구기능, 도시행정기능, 문화·국제교류기능 등 6대 복합기능 중에서 이제 중앙행정기능만이 완료된 것이다. 또한 행정중심도시로서의 외관은 갖추었으나, 아직도 정치기능은 서울에 남게 되어 국회 업무와 국정수행을 위해 중앙부처 장·차관을 비롯한 간부급 공무원들의 잦은 서울 출장 등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초기부터 우려했던 국정비효율의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2004.10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기관의 3분의 2가 위치해 있는 세종시가 국정효율 증대와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세종시의 행정구역이 1읍 9면 3개 행정동(14개법정동)으로 이루어져 3개 행정동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신도시지역으로 세계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나, 과거 연기군과 공주시, 청원군의 일부에서 흡수된 1읍 9개 면지역은 80년 넘게 정채되어 있는 조치원읍을 비롯하여 성장이 멈추어선 침체지역으로써 신도시지역과의 불균형발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세종시가 그 내부의 불균형발전이라는 모순된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지역내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세종시 신도시개발이 본궤도를 찾기 시작하면서 대전, 청주, 공주 등 인근지역의 인구가 크게 유입되고, 세종시 내부에 시설된 병원, 대형마트, 문화와 체육, 학원, 휴식 공간 등 정주환경만으로는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한계와 수도권에서 이전한 16,000여명의 중앙행정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생활만족도를 끌어올리

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많이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Ⅲ. 세종시의 발전비전과 전략

1.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정립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세종시의 당초 건설목표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이었고, 2004.10월 현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명칭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경되었으나,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들의 이전계획은 현재의 위헌결정 범위 안에서 최대한 신행정수도에 가깝게 이전하도록 수립됨에 따라 과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대로 국정의 비효율과 국정단절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그동안 많은 분들이 고민해 왔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현재의 위헌결정 범위 안에서 시정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은 바로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대면보고나 대면회의에 의한 국정과 국회운영방식을 IT기술을 활용해 화상회의로 전환하고, 국회출석도 각 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하도록 해 각 중앙부처의 국·과장이 국회업무로 인한 출장을 줄이는 일이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국회도 우리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의 위헌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 세종시에 이전한 중앙부처의 소관 국회상임위원회라도 우리 세종시에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분원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다음은 최근 들어 대통령께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거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이 많은 데,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필요시 대통령께서 수시로 세종시에서 2~3일 간 머물면서 국가적인 일들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세월호와 최근의 의정부 도시생활주택 화재 등에서 보듯이 현대생활에서 일

어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는 구조적으로 대형화되고, 골든타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조직 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새로이 설치된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문제가 신속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행정도시 건설특별법」에서 정한 이전 제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세종시로 이전되어야 함에도 정부의 이전고시 등 법적 절차가 미진한 상태에 있다. 그리고 2014년도 신설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세종시로 이전된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를 총괄하고 정부세종청사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또한 중앙부처 간의 협업에 의한 업무효율과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은 세종시 만을 위한 것도 아니며, 세종시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다행히 올해는 국가적인 규모의 선거가 없는 해인만큼 정부와 국회에서 ‘국정의 정상화’를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 생각한다.

이와 함께 2015년도 우리 세종시가 보다 많은 국가적 행사와 공공기관을 유치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이미 오는 10월 한글날 행사와 지방자치박람회, 국제 심포지엄 개최와 제2회 세계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유치해 준비에 들어갔다.

2. 도농이 함께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우리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성공을 가늠하는 상징도시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신도시지역과는 달리 기존 읍면지역은 아무런 국가차원의 지원 대책이 없어 양 지역 간 생활격차 등 지역 내 불균형과 주민 간 갈등 해소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하고 있다.

따라서 2015년도 우리 세종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원읍과 북부권은 경제중심축으로, 신도시지역 중심의 남부권은 행정중

심축으로 하여 이를 쌍두마차로 삼아 세종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남부권 행정중심축은 당초 설계했던 밑그림의 원안을 토대로 최근 변화한 현실을 적용시켜 제대로 만들어 나가고, 조치원을 비롯한 북부권은 산업단지(미래, 첨단) 조성, 창조마을 시범사업, 과학벨트 등과 연계한 경제중심축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청춘조치원프로젝트를 추진하여 80년 넘은 낡은 도시 조치원을 오는 2025년도까지 인구 10만 명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젊은 도시로 탈바꿈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청춘조치원프로젝트는 조치원 동서횡단도로와 세종시 제2청사 건립 등 2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재생사업과 신시가지 조성 및 교통여건 개선 사업을 펼쳐 구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넘어 조치원읍을 세종시의 경제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미래전략적 접근방식이다.

이와 함께 지역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여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세종형 로컬푸드운동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세종형 로컬푸드운동으로는 직매장 설치, 생산자와 소비자 간 연합체를 구성하고, 로컬푸드 통합 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세종시민의 삶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세종시는 정부의 역점시책인 창조경제를 농업분야에 적용하여 시행하기 위해 농업과 ICT가 융합된 창조마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SK의 ICT와 에너지 부문의 역량을 결합해 농촌지역에 적합한 창조경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스마트 팜 ▲지능형 영상보안 ▲스마트 로컬푸드 ▲스마트 러닝 ▲새로운 모습의 에너지 타운 조성 ▲영농기술 테스트 베드 제공 등 6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친환경 태양광 에너지사업과 스마트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가소득의 안정적 증대를 도모하고, IoT기술*(사물인터넷 / Internet of Things)을 활용한 원격 재배 관리 및 지능형 영상보안으로 농업생산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전망이다. 앞으로 세종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거점으로 창조마을 시범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IoT기술은 모든 사물이 인간의 구체적인 개입이나 지시 없이 협력적으로 네트워킹, 정보처리, 센싱을 하는 사물 공간 연결망

이와 관련해 우리 세종시에서는 지역내 균형발전을 위해 연초 조직개편을 통하여 균형발전국을 신설했고, 균형발전국 안에 로컬푸드과, 청춘조치원과를 두고, 앞으로 세종시 균형발전의 심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3. 제2수도권을 지향하는 충청권 상생발전

세종시의 신도시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은 당초 개발계획부터 레저와 관광 등의 기능과 생산시설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그 기능을 인근 대전과 청주 등의 대도시와 상생 발전하도록 계획된 도시였다.

따라서 당분간 세종시가 인구와 경제 등 주변 지역의 주요 기능을 흡수하는 빨대효과(Straw Effect)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세종과 인근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도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세종시의 발전이 거듭될수록 대전과 청주, 공주와 천안 등 충청권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발전의 새로운 중앙핵심권(제2의 수도권)으로 성장하여 광역 도시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세종시는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세종 권역과 대전권역 등 광역권도시계획을 통해 기능과 역할을 조정해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세종시와 인근지역의 상생발전 과제는 「세종시 설치 특별법」으로 설치된 총리실 산하 세종시지원위원회의 법적사무이므로 세종시지원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세종시와 대전, 충남, 충북이 상호 협력해 개발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청권발전협의회 운영 등을 내실화 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권 상생협력을 위한 세종시 제안사업]

사 업 명	선 택 사 유	시 도 의 견
1. 세종시 국회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지위확보	▶ 세종시 중심의 국정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국회 및 정부측에 지속건의 등 충청권의 공동노력 필요
2.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 청주~세종~대전 간 시내버스 환승체계 구축 · 충청선(조치원~보령) 철도 신설 ·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착공	▶ 주민의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 ▶ 충청권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 충청권 중심의 광역교통망 구축	▶ 관계기간과 협의를 통해 광역환승체계 구축 검토 ※ 세종시 여건상 단계적인 환승체계 구축(BRT 우선 구축→시내버스 확대) · (사유) 관내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에 따른 재정지원 증가 ▶ 중부내륙 물류환경개선, 충청권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 철도망 구축시 토지이용 및 도시개발 등 제약이 수반 됨 ▶ 행복도시 광역교통망 계획 반영을 위한 충청권 협조가 필요

또한 금년도에는 우리 세종시에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배후 지원할 대학연구기능 단지(4생활권)의 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계수준의 기초과학 육성을 위한 연구 환경 조성과 사업화를 위한 SB(Science-Biz)플라자 건립 등을 통해 산·학·연 인프라유입과 인력양성 및 창업 지원 등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4. 모범적인 신자치모델 구현

세종시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단층제(광역+읍면동)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광역지자체로 본청업무 과부하 및 인력부족으로 인한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세종시형 신자치 모델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단층제의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점) 행정을 시도와 시군구로 나눠 수행하는 타 자치단체보다 빠른 민원 처리 등 행정효율성과 높은 대응성, 시민에게는 비용절감,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가능 ● (단점) 새로운 자치모델에 대한 인력산정, 읍면동 기능조정 사례가 없어 인력확보 및 초기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 초래 ⇒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참여, 자치혁신기획단 운영, 새로운 모델개발 및 제도화 건의 추진 중)

이를 위해 세종시는 지난해 9월 세종시 자치혁신단(위원장 조명래 단국대 교수)을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신자치 모델 관련 내부T/F팀을 구성하고, 2014.12월 신자치모델 개발을 위한 자치혁신단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세종시형 자치모델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은 근린자치를 위한 당면과제, 권역·지역별 통합 읍면동의 필요성과 본청업무의 이양, 신 재원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바 있다.

특히, 세종시가 구상하는 통합 읍면동제도는 지난 1월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책임 읍면동제 및 대동제 실시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며, 금년 상반기 중 시청이 예정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북부권(조치원·연서·전의·전동·소정)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일환으로 세종시형 책임 읍면동제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별 위임사무의 적정성과 인력 배치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등을 거쳐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추진하는 절차로 진행할 계획이다.

IV. 세종시의 미래상

이러한 우리 세종시의 2015년도 발전비전에 맞게 시정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우리 세종시가 목표하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통해 목표로 하였던 국토 불균형 해소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족 기능을 갖춘 인구 80만 명의 문화, 안전, 교육 등을 통한 사람이 먼저인 살기 좋은 세계명품도시가 멀지 않아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는 행정수도를 옮겨 성공한 도시다. 푸트라자야도 행정수도로서 정착하기 전까지 많은 논란과 과제가 있었다. 푸트라자야는 착공 14년만인 2010년도에 완성된 행정수도로서 지금은 행정수도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되고 있다.

우리 세종시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푸트라자야처럼 세계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와 정부차원의 지원은 물론, 대전과 충남, 충북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지방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본격적인 세종시대의 막이 올랐다. 세종시의 건설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염원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우뚝 서 5천만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세종시의 미래의 모습은 머서(Mercer)*가 뽑은 세계 주요도시 삶의 질 평가 1위, 살기좋은 도시 1위, 세계적인 자방자치의 모범사례의 도시가 될 것이다.

* 머서(Mercer) : 글로벌 인적자원 및 재정서비스 컨설팅 전문회사, 매년 220여 개 세계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정치, 사회, 경제 등 10개 분야 39개 항목을 기준으로 삶의 질을 평가

2015년 충청남도의 발전비전과 전략

송 석 두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2015년 충청남도 비전과 전략

송석두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3 + 3’ 행복삶터, 늘 새로운 충남

■ 2015년도의 충남도정은 공정과 신뢰, 사회적 정의를 확대하여 도민이 「행복한 삶터」를 만들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정부와 행정이 올바른 도리를 지켜서, 공정함이라는 가치를 유지하고 신뢰를 쌓아가야 하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계층과 지역, 산업과 산업, 빈부의 격차를 뛰어 넘어 지역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고, 210만 도민 모두가 주권자로서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사회 양극화 등 시대적 과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민선5기」에 마련한 도정 각 분야별 중장기 계획을 차질 없이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세계 경제의 중심이 서구에서 아시아 환황해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에서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으로 세계인구의 31%, GDP의 20%, 교역의 22%를 점하고 있고, 동아시아 항만 물동량은 1990년 26%에서 2015년 41%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환황해 아시아 경제권이 EU, 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환황해권 아시아 경제시대는 우리 도가 직면한 과제이자 새로운 기회입니다.

충남의 기회인 환황해권 아시아 경제시대를 주도 할 수 있도록
▲ 민선5기부터 추진한 3대 혁신과제와 시대가 요구하는 「행복한 성장, 행복할 권리, 행복한 환경」 등 3대 행복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남, 21세기 환황해를 아시아의 지중해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시대 경부축 중심으로 산업화를 이루었듯이 21세기에는 서해안이 대한민국의 신성장축이 될 것입니다. 충남은 이러한 지경학적 입지에 주목하고, 도청사의 내포신도시 이전을 도 발전 전기로 삼아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 建都 충남」을 목표로 「서해안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충남 서해안을 아시아 교역의 전진기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경쟁력 있는 해양산업 육성 등 3대 목표 6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를 열어 나갈 준비를 갖춘 것입니다.

- ❶ 아시아 교역의 전진기지 구축 → 국제물류 거점, 네트워크 도시체계구축
- ❷ 지속가능한 생태·관광기반 조성 →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해양관광 메카 조성
- ❸ 경쟁력있는 해양산업을 육성 → 수산업 미래산업화, 해양연관산업 육성

도에서는 앞으로 서해안 중추도시로서 내포신도시의 조기정착에 힘써 나가면서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서해선 고속전철, 장항선 복선전철화 등 녹색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평택~부여 고속도로,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 충남 서해안을 동북아 관문으로 개발하기 위해 당진항 등 서해안 항만 기능보강, 대산항과 중국 용안항간 여객선 운항 등 서해안 비전 실현을 위한 기반 확충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 建都(建道) 충남」의 미래시대를 준비해 나가기 위해 「환황해프로젝트추진단」을 구성, 아시아(중국) 기업·자본의 도내 투자유치 방안 등 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민선5기 「3대혁신」으로 이룬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가는 「행정혁신」입니다.

민선5기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온 혁신과제들을 정교하게 다듬고 고쳐서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얻고 한 차원 높은 혁신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조직을 만들어 공직자들의 열정과 자기주도성을 키워 나아가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일할 수 있도록 자기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관점에서 정보공개 등 「제로-100프로젝트」 고도화를 통해 도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 한편, 「3+3」 정책과제와 민선6기 핵심과제 중심으로 직무성과 계약 체결, 평가로 연계하여 성과중심 도정운영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혁신」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어 역할을 다하고,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여 실천하는 자치도정을 구현해 나가야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남형 동네자치」를 육성해 나갈 현장 활동가 발굴, 조직화하여 동네자치 공동체를 육성하겠습니다.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무, 재정 등 기능을 재정립하는 한편, 커뮤니티 중심, 유관기관 연합 등 도민이 쉽게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인되고, 살기좋은 농어촌을 만드는 '3농혁신' 입니다.

농어업이 없는 나라 없습니다. 농업의 발전 없이는 그 어떤 나라도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농업은 모든 인류,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기본이자, 모든 경제활동과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근간이자 생명산업인 농업을 발전시켜 나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 기반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농어민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유통과 생산과 소비를 주도해 나가는 새로운 농어업의 미래발전비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향은 이미 민선 5기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친환경유기농을 향한 생산혁신을 꾸준히 지속시켜 나갈 것입니다.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각종 제도 등 농업인프라를 확대해 친환경농업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이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질 좋은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통조직혁신을 꾀하고자 합니다. 로컬푸드로 대변 되어지는 지역순환식품체계 내에 기본 물량이 직거래 될 수 있도록 지역순환형 식품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선순환 경제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누구나 살고 싶고, 한 번 오면 다시 찾고 싶은 농어촌을 만드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농어업의 미래를 이끌 지역인재 육성, 도농상생발전시스템 구축 등 우리 농어촌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어민 스스로 발전의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농민, 농정, 농협이 한 몸이 되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행복한 성장, 행복할 권리, 행복한 환경 등 「3대 행복과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 자영업에서 기업까지 「행복한 성장」 실현입니다.

행복한 성장이란? 각 산업역영간 골고른 성장, 양적·질적 성장을 모두 포함하며 환황해경제시대, G2체제 세계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국내·외 경제·산업의 미래방향을 예측하여 충남의 장점을 기반으로 충남의 미래를 담보할 「충남경제비전 2030」을 수립하고, 지역수요를 반영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기반조성 등 지속가능한 경제산업발전 기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문화, 생활여건, 의료·복지, 환경, 근로생활개선 등 복합적 정주여건을 갖춘 상생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추진, 우수 외투 기업과 국내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해 나가면서 서민경제 안정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복지 실현에 힘써 나아가고, 충남의 특화된 ICT 융합 문화콘텐츠 개발 등 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문화 산업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행복할 권리」 구현입니다.

행복할 권리란? 도민의 안전과 기본적 삶은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생명과 인권이 우선되고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인간다운 삶이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 여성·다문화가족 등 계층별·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개발, 여성폭력예방 등 인권보호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어려운 계층이 스스로 자립하여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다문화가족, 북한 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착지원 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히,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 「생명존중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어린이 집 폭행사건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우수 보육교사 양성 등을 통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토록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100세 시대, 보육에서 평생교육까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도랑에서 서해까지 「행복한 환경」 실현입니다.

행복한 환경이란? 하늘·땅·바다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도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역사·문화환경까지 포함하며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을 잘 가꾸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 살리기 추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 「물 복지」를 확대하고, 연안·하구 생태 복원을 위해 도내 방조제 전수조사와 법제화 등 국가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비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LP가스 시설개선 사업 등 서민층 도시가스 공급망을 확대하여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서관·미술관 등 생활속의 문화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소외지역 방문공연, 문화마을 조성 등을 통해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정주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 등 우리 도가 보유한 역사문화유산 지구를 잘 보존하여 문화재청과 지자체간 공조를 통해 차질 없이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내포 천주교 성지 순례길 등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명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과제는 충남이 국정을 리드하고 도민의 참여와 성원을 바탕으로 완성하겠습니다.

21세기 가치실현과 지속성장, 국가와 지방관계 재정립 차원에서 지방이 제안할 국가정책 아젠더를 연구하고 국정의 지방 실현과정에서 지방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화하는 등 도가 시군을 지원하고, 국정 운영을 이끄는 도다운 역할을 수행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민과 관의 협치를 강화하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천하면서 주민이 주인되는 도정운영을 통해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시민 주권시대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충청남도가 안고 있는 시대적 과제와 2015년도 충남도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러한 가치와 방향으로 도정의 각 분야별 현안업무와 계획들을 보다 내실 있게 점검하고 추진하여, 2015년도에 성과중심 도정을 실천하여 도민이 「행복한 삶터」를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충청 상생협력의 비전과 과제

신 희 권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충청 상생협력의 비전과 과제

신희권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1. 충청권의 대내외적 변화

- 세종시로의 국가행정기능 집중
-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 새정치민주연합이란 야당 소속의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등장
- 새누리당이란 여당 소속의 강창희/이완구 의원의 위상 변화

2. 대전/세종/충남/충북의 민선6기 비전과 충청 상생협력 비전

- 대전의 민선6기 비전: 시민이 행복한 대전, 미래로 나아가는 대전
 - 세종의 민선6기 비전: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
 - 충남의 민선6기 비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 충북의 민선6기 비전: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 ↓↓
- 충청 상생협력 비전: 함께하는 충청, 새로운 충청, 행복한 충청인

3. 지역간 경쟁과 협력의 논리

1) 티부모형

티부가설(Tiebout hypothesis)로도 불리는 티부모형은 티부(Charles E. Tiebout)가 주장하였다. 다양한 가격(조세) 하에 다양한 공공서비스 묶음을 제공하는 지방자치체가, 단일 가격(조세) 하의 균일한 공공서비스 묶음을 제공하는 단일정부체제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한정된 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더 많은 소비자만족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개인들은 각 서비스들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와 세금 지불 능력에 따라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 지역사회에서 다른 지역사회로 자유롭게 이동할 것이라고 가정된다. 다시 말해 자기 효용을 극대화해주는 지방자치단체를 찾아가 정착한다는 것인데, 이를 ‘발에 의한 투표’ (voting with the feet)라고도 한다. 이 모형은 개인의 선택과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최적의 인구를 구성함으로써 지역관할, 거주자들의 선호에 따라 지방공공서비스의 균형적인 분배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균형상태를 놓고 보면 단일의 전국적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결국 티부모형은 공공서비스의 공급도 민간재와 마찬가지로 독점체제보다는 경쟁체제가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2) 외부효과의 파급범위

공공서비스의 지리·공간적인 외부효과의 파급범위를 고려할 때,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편익의 파급범위와 해당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관할구역이 일치하여야 한다. 만약 외부효과의 파급범위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공공서비스를 기초자치단체가 공급을 담당한다면,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자기 관할구역 안에 미치는 편익만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적합한 양보다 과소공급될 것이다.

이에 따라 <표 1>에 나타나듯이 소방, 경찰, 상수도배분, 가로 등 서비스 등은 기초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공해제거, 상수도공급, 쓰레기수거, 대중교통, 도시계획 서비스 등은 광역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빈곤층소득보조, 연구개발, 직업교육 및 노동시장정책 서비스 등은 초광역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표 1> 공공서비스 유형별 외부효과의 파급범위

서비스종류	편익의 공간적 범위		
	지방	지역	초광역지역/국가
소방	×		
경찰	×		
상수도배분	×		
가로등	×		
공공도서관	×	×	
공해제거		×	
상수도공급		×	
쓰레기수거		×	
대중교통		×	
간선도로·국도		×	
공항		×	
도시계획·재개발		×	
교육			×
빈곤층소득보조			×
연구개발			×
직업교육 및 노동시장정책			×
공원 및 오락시설	×	×	×

3) 규모의 경제

공공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티부의 경쟁의 효율성 논리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들 수 있다. 이것은 대량생산의 경우에서와 같이, 생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비에 비해 생산량이 보다 크게 증가함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생산물의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면 공공서비스 공급주체는 관할구역이나 인구규모가 충분히 커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을 때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보장된다.

4) 집적의 경제

도시집적경제 내지 지리공간상의 집적의 경제(agglomeration economies)는 일종의 규모의 경제효과로서 도시규모가 커짐에 따

라 생산성이 증대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것은 지역화경제와 도시화경제, 내생적 기술경제의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지역화경제(localization economies)는 동일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① 같은 산업들의 기업간 기능의 분할을 통한 산업내 전문화의 이익, ② 지역노동시장의 탐색비용을 줄여주는 이익, ③ 혁신의 파급을 촉진하는 의사소통상의 이익, ④ 특정 산업의 필요에 부응하는 공공의 하부구조를 공급하는 규모의 경제 등을 동일한 산업의 집결을 통하여 누릴 수 있다.

도시화경제(urbanization economies)는 도시규모의 증대에 따라 다양한 산업의 집결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부경제의 효과를 의미한다. 도시화경제효과는 기업이 직면하는 외부환경이 규모경제효과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 전체규모와 관련한 경제활동의 다양성(diversity)에 규모경제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규모경제효과는 성장과 혁신을 위한 촉진제가 된다.

내생적 기술경제는 특정지역이 그 지역내 기술파급의 효율성으로 인하여 비교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외부성을 말한다. 특히 자본의 축적은 그 자체에 새로운 기술을 내재함으로써 기술파급효과를 갖게 되며 이러한 기술유발은 노동자의 효율성을 높여 자본과 노동의 양적 증가에 따른 생산물의 증가 이외에 이러한 내생적 기술진보에 따른 추가적인 외부경제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주장은 ‘규모에 따른 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을 전제로 하는 신고전학과 성장모형과 크게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내생적 성장모형은 ‘규모에 따른 수익증가(increasing returns to scale)’를 예측한다.

5) 연결의 경제

지방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지방정부간에 각 지방정부가 나름대로의 분야에 특화하다보면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도모할 필요성이 나타나는 바, 이것을 연결의 경제라 한다. 일단 안정적인 연결고리를 갖게 되면, 매번의 탐색비용과 확인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거래나 교류사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비용절약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지방정부간 네트워크에 내생적 기술경제가 존재하는 바, 해당 지역내 기술과급의 효율성으로 인하여 비교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외부성이 나타나는 연결 네트워크의 외부성효과를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지방정부도 모든 자원을 풍족하게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타 지방정부에 자원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고, 지역개발을 추진하거나 대규모 공공서비스시설을 건설하는데 있어 모든 지방정부는 부족한 재정과 높은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위험 내지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4. 충청권 상생협력의 과제

1) 경쟁과 협력의 조화

- 경쟁을 통한 티부적 효율성 달성
- 협력을 통한 지리공간적 외부성의 내부화, 규모의 경제, 집적의 경제, 연결의 경제 달성

2) 상호협력에서의 유의점

- R. Axelrod의 *The Evolution of Cooperation*(1984) 참조.

첫째로, 상대방의 성공을 시기하지 말라. 사람들은 제로섬의 상황에서 상호대응을 생각하는데 익숙해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한 사람이 이기면 다른 한 사람은 져야만 한다. 그 좋은 예가 체스경기이다.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기의 대부분을 상대방보다 더 잘해야만 한다. 백의 승리는 반드시 흑의 패배로 귀결된다. 그러나 삶의 대부분이 제로섬 경기만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양쪽 모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양쪽 모두 나쁜 성

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비교기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바, 이 기준은 종종 자신의 성공에 관련되는 상대방의 성공이다. 이 기준은 시기심을 초래한다. 이러한 시기심은 상대방의 이익을 수정하려는 시도로 이어진다. 죄수의 딜레마 형태에 있어서 상대방 이익의 수정은 배신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배신은 더 많은 배신과 상호 응징을 낳게 되고 따라서 시기심은 자기파괴적이다. 자신의 목적이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성공에 관련하여 자신의 성공을 판단하는 것은 좋은 기준이 되지 못한다. 더 훌륭한 비교기준은 상대방이 나의 입장에 맞추어 좋은 성과를 갖는 것을 토대로 내가 얼마나 좋은 성과를 갖느냐 하는 것이다.

둘째로, 먼저 배신하지 말라. 컴퓨터 토너먼트와 이론적 결과들은 상대방이 협력하는 한 자신도 협력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상대방이 협력하기까지 배신하여 상대방이 협력하면 그때서야 협력하기 시작하는 안전한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토너먼트의 결과들은 이러한 방법이 실제로 매우 위험한 전략임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초기의 배신이 상대방의 보복을 불러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이것은 양쪽을 착취 또는 상호배신이라는 초기의 양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국면으로 몰고 갈 것이다. 만약 상대방의 보복을 처벌하면, 이러한 문제의 악순환은 앞으로 계속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을 관용한다면, 자신이 이용당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 교훈은 배신하는 것이 처음에는 좋게 보일지 모르나 결국에는 그것이 자신의 성공에 필요한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협력에는 협력으로 배신에는 배신으로 대응하라. ‘맞받아 쏘아주기(TFT)’ 전략의 놀라운 성공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에 있는 바, 이것은 바로 상호대응을 행하라는 것이다. TFT 전략은 처음에는 협력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상대방이 이전에 했던 행동을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다. TFT 전

략은 자기 자신의 성공의 토대를 파괴하지 않고, 반대로 성공적인 전략들과의 상호대응을 번성하게 한다. TFT 전략의 상호대응은 이론적인 이유에서도 훌륭하다. 현재와 관련하여 미래가 충분히 중요한 경우에 TFT 전략은 집단적으로 안정적인 전략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TFT 전략을 사용한다면, 특정한 경기자에게 TFT 전략을 사용하라고 조언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TFT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상호대응이 충분히 오랫동안 지속되리라는 것을 확신할 경우 같은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배신에 반응함에 있어서 TFT 전략은 처벌과 관용의 균형을 주장한다. TFT 전략은 상대방이 배신하면 어김없이 그 다음 기에 보복하였고, 이러한 대응은 토너먼트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 상대방의 배신에 대하여 한 번 이상의 배신은 좋지 못한 상황의 단계적 확대의 위험이 있으며, 배신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이용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넷째로 너무 현명하지 말라. 토너먼트의 결과들은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너무 현명해지기 쉬움을 보여준다. 복잡한 전략들은 단순한 전략들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실제 제출된 이른 바 극대화 전략들은 상호배신의 관례에 빠져서 대체로 좋지 못한 성과를 나타냈다. 상대방의 반응을 상황의 고정된 부분으로 보고 자신의 점수를 극대화하려는 전략들은 비록 자신들의 제한된 가정에 합당한 타산적인 면에서는 현명할지 모르나 자신의 행동이 다시 반영되는 상호작용의 양상을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의 행동에 반복적으로 상응하는 반향적인 과정을 제외한다면 상대방의 행동을 고려할 때 현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체스와 같은 제로섬 게임과 반복적인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비제로섬 게임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체스에서는 자신의 의도를 상대방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대방이 더 많이 의심하면 할수록, 자신의 전략은 더 효율적이다. 상대방 행

동의 비효율성이 자신에게는 이익이 되는 제로섬 상황에서는 자신의 의도를 숨기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非제로섬 상황에서는 항상 그렇게 현명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반복적인 죄수의 딜레마에서는 상대방의 협력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얻는다. 협력을 조장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자신이 상호대응하리라는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말도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행동은 말보다 더 큰 효과를 갖는다. 이것이 바로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하는 TFT 전략이 상당히 효과적인 이유이다.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